

“尹 정부, 야당 파괴에 권력 남용... 국민·역사 두려워 하라”

민주당 지도부 출범 100일...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대신 최고위 발언 “검찰 증거 없는 정치 탄압에 맞서 싸울 것...정부 무능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는 출범 100일을 맞은 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며 “질식하는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잠시 말권 권한을 민생이 아닌 야당 파괴에 남용한 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경고한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선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보복 수사가 야당 대표와 야당, 전 정부 인사를 넘어 이제는 본인이 재직했던 검찰 내부로까지 향하고 있다”면서 “정치검찰은 법치주의의 파괴자이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6년 보복수사 관련한 질문을 받았을 때 윤석열 검사가 했던 말을 윤석열 대통령께 그대로 돌려드린다”면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강패자, 검사입니까?”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인사·민생·법

치·외교 등 9가지 분야에서 무능함을 보여줬다고 주장하며 “9가지 무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위기 상황에 정치 9단이 절실하지만, 무능 9단 정권”이라며 “정치는 실종됐고, 공포정치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복핵 위협과 마찬가지로’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를 인용해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며 “자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전일 송영길·이낙연 대표 등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것과 달리 최고위원회의 발언으로만 입장 발표를 갈음했다.

본인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인 만큼, 수사와 관련한 질의 응답을 피하기 위한 교육자책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100일 기자회견) 검토가 있었는데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여러 협상이 되고 있어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보다 신년에 상황이 정리된 후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 대표를 향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이에 맞서 싸우겠다는 지도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탄압과 정치보복에 맞선 지난 100일은 참으로 험난한 시간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방위적 탄압에 맞

서 싸우겠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저도 함께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 대표 취임 100일 동안 검찰의 정치 탄압은 극에 달했다. 8·28 전당대회 이후 이 대표를 향한 압수수색만 53건이나 있었다”며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능력과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은 결국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이렇다 할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수사를 벌이는 건 야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본다”며 “당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정의당 “노란봉투법 반드시 통과”

공동 기자회견...박주민, 법사위 통과 난망시 ‘패스트 트랙’ 시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5일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해배상소송을 막아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은 상용노동자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다”면서 “상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하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 논의에 당장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은 회견 뒤 “노조법 2·3조는 분명하게 손을 봐야 한다”면서 “감당하기 힘든 손해배상 위형 등으로부터 노동자를 더는 방치할 수 없어 상황에 맞춰 수단을 잘 동원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60일이 지나면 수단이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한노위를 통과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패스트 트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한노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당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단독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다시 상임위로 돌려보내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윤 대통령, 적대적노동관 기반 공안 통치”

민주 ‘정유·철강 업종 추가 업무개시명령 지시’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적대적 노동관’이라며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직접 파업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연일 쏟아내더니, 심지어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로’라고 몰아세웠다”며 “오로지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게 핵 위협으로 느껴

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는 적격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라며 “윤 대통령이 노동계를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지난달 24일 파업(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으며, 이에 정부는 같은 달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 대통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로”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을 위한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라며 “언제까지 복수를 걸고 화물차가 달려야 하느냐. 대화와 협상 대신 협박과 억박지르기, 업무개시명령 등 국민과 대화와 타협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라고 비난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자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발언”이라며 “국민이 말살과 제거의 대상인가”라고 꼬집었다. 전용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페이스북에 “또다시 화물연대를 ‘북핵’, ‘폭력’으로 간주하고 색깔론까지 입혀 호도한 것”이라며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전 의원은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노동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며 “노동 문제 본질을 외면하고,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색깔론까지 입히는 것은 국민을 또다시 갈라놓는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일선 학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확대 시급”

심철의 광주시의원 지적

광주 일선 학교의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교육기구 보유가 시 교육청 권고기준에 미달해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심철의 의원(민주·서구4)은 최근 광주시교육청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자동심장충격기와 심폐소생술 교육기구 보유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물 한 동당 한 대의 자동심장충격기와 학교당 4대의 교육용 마네킹, 자동심장충격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교육청의 권고 기준이다. 대부분 이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화된 기구는 교체하고 자동심장충격

기 202개, CPR마네킹 358개, 교육용 자동심장충격기 590개가 추가로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재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심장충격기로는 생명을 구하기에 턱없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재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투입과 시설 배치, 올바른 작동법 교육 등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광양시 공고 제2022-2325호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2. 6.
광 양 시 장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나.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골약동(황금, 황길) 일원
 다. 사업시행자 : (주)LF리조트
 라. 사업 면 적 : 2,327,076㎡
 마. 사 업 내 용 : 관광단지 조성사업
2. 공고기 간
 가. 공 고 기 간 : 2022. 12. 6.(화) ~ 12. 21.(수)[15일간]
3. 공청회 개최
 가. 개 최 일 시 : 2022. 12. 28.(수) 14:00
 나. 개 최 장 소 : 골약동주민센터 3층 대강당(주소 : 광양시 성황6길 15(골약동))
4. 의견진술자 추천서 제출
 가. 제 출 기 한 : 2022. 12. 21.(수)까지
 나. 제 출 처 : 광양시청 관광과
 다. 제 출 방 법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에 따른 의견진술자추천서를 제출처 또는 전자우편(cksg0924@korea.kr) 제출
 라. 발 표 내 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계획과 관련된 환경 보전방안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함.
5. 그 밖의 문의사항
 ※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관광과(☎061-797-2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화질 LED플칼라 최고화질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성 최고!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송창로 입구 공인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최적의 장소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